

# 열린마당

## 종교교도소

### 사립교도소 설립법안 빠르면 올내 마련

“신중하게 진행해야” 여론

국민회의 제1정책조정위원장인 남궁진위원이 9월 29일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 사립교도소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안을 빠르면 올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독교교도소 설립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와 개신교가 종교교도소 설립에 적극적인 이유는 교도소 민영화로 인해 과밀수용의 해소, 교도행정의 질 향상, 예산절감, 교도소 비리척결, 선교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회의의 경우는 김대중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해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할 처지다.

사실 현재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적정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9월말 현재 수용인원은 7만1백여명으로 적정인원 5만6천여명보다 1만5천여명 이상 많다. ‘교화가 불가능하다’ ‘구급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재범률도 57%에 이른다. 이같은 이유에서 사립교도소 설립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국의 몇 가지 성공 사례도 사립교도소 설립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95년 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준비작업을 해 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브라질의 휴미타 기독교교도소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이 교도소를 거쳐간 520명의 재소자 가운데 20명만이 교도소로 다시 돌아왔으며, 결국 재범률은 4%에 그쳤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립교도소가 모두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83년 미국 최초의 사설교정법인 CCA의 터네시주 교도소 운영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교정업체들만 큰 돈을 벌게 해줬을 뿐 정지적인 부패와 재소자 처우의 질적 저하 등의 많은 문제를 만들었다. 따라서 사립교도소 운영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우리 사회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 현실화하기까지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일수교수(고려대)는 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가 구성하고 있는 기독교교도소 시설운영안을 소개했다. △3백~5백명 수용 규모 △시설은 기독교계가 지어 국가에 헌납 △교도소 시설비는 기독교계가 부담, 시설관리비와 국가 과건 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 부담, 교화프로그램 운영비는 기독교계 부담 △수용대상자는 기독교신자를 우선으로 지원으로 함 △소장은 기독교계가 선출, 법무장관 승인 등이다.

기독교교도소설립추진위 이사장 이종윤목사는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기독교계가 모두 할 수 없다. 부지는 정부가 마련해줘야 하며, 시설비의 절반도 정부가 내야 한다”고 답변, 기독교교도소 설립이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내비쳤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a.com)

종교교도소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는 9월 29일 공청회를 열고 기독교교도소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증가, 높은 재범률(97년 57%)로 교정효과가 미약하므로, 기독교교도소 등 사립교도소를 설립해 과밀을

해소하고 재범을 하락을 위한 교정프로그램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또다른 형태의 종교차별 및 편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 국가형벌권의 민간이양 등 법적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한 종교계와 국민회의의 입장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 기독교교도소案 종교 형평성 우려

법성 (스님·조계종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사립교도소, 특히 종교교도소의 설립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전문교화 능력을 갖춘 인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의 재원도 종교단체에서 마련하기 쉽지 않다. 지금은 종교의 가르침으로 재소자의 사회복귀를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종교교도소 설립 이전에 종교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종교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넘는데도 사회는 왜 갈수록 악화되는가를 돌아야 한다.

개신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기독교교도소 설립에 대해서도 한가지 짚을 부분이 있다. 기독교교도소 운영방안에 따르면, 입소자를 기독교를 신봉하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밝혔다. 입소하고 싶어도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입소할 수 없다는 얘인데, 이는 종교를 이유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차별이다. 법안 심의 때 신중한 검토해야 하며 마땅히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신교계가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일을 찾고 있다는 점은 존중되어야 한다. 불교계도 우리 사회의 아프고 어두운 부분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사립교도소는 언젠가는 설립될 것이고, 필요성도 있다. 이에 대한 불교계의 대비가 필요하다.

### 재원마련 어려움 위탁운영 바람직

김정수 (신부·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심지어 교정시설이 아니라 범죄학교라는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마땅히 종교계에서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순간의 잘못을 깨닫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일에 마땅히 나서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개신교계에서 먼저 사립교도소 설립을 제안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교도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땅을 확보하는 어려움은 둘째 치더라도 3백~5백명 수용 규모의 교도소를 짓는 건축비만 최소한 2백여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런 큰 돈을 만들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종교계는 교정교화를 통해 재소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목적이 일치하니 종교교도소 설립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방법이 문제다.

각종 복지시설의 예에서 보듯 정부가 시설을 지어 종교 및 사회단체에 위탁운영케 하는 방법은 어떨까. 또 국가형벌권의 민간이양이라는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교정교도와 부분만 종교계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서둘러 말고 정부와 종교 및 사회단체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이 협의하는 단계가 먼저 필요하리라 본다.

### 적절한 정부감독 교정기능 강화

이종윤 (목사·기독교교도소설립추진위 이사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기류 속에서 현행교도소에서의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사립교도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등 서구의 사립교도소 실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인 이익이 사립교도소 설립의 근거가 되면 실패한다.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부작용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소수 직원에 부과된 과도한 업무량 △재소자의 최저 권리가 유린되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사립교도소의 효율성을 무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처사이다. 따라서 자유시장형 자본주의와 행정편의적 관료주의의 악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정부감독 하에 교정교화를 이루기 위한 사립교도소는 미래가 밝다.

한기총에서는 95년 10월 ‘한국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정교화사업에서의 정당하고도 필연적인 종교의 역할에 대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해왔다.

우리나라의 교정 현실에 맞추어 교정당국의 감독과 긴밀한 협조하여 기초한 체계적인 교정 프로그램의 실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다.

### 형벌권등 검토 설립기준 엄격히

남궁진 (국회의원·국민회의 제1정책조정위원장)



외국의 사립교도소 운영 결과 재범률 감소 효과가 크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립교도소를 설립하자는 의견에 공감한다. 교도행정의 질 향상과 재범률의 하락, 정부 예산절감, 교도소 내부비리 척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당에서도 가두는 교도소에서 가르치는 교도소를 가기 위해 사립교도소 설립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사립교도소에는 몇 가지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 종교단체가 국가공권력의 하나인 형벌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느냐. 헌법 20조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을 침해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사립교도소 설립은 엄격한 허가제가 바람직하다. 사립교도소의 지휘·감독권과 임원 임명권은 법무부가 행사해야 한다.

사립교도소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든다. 불교와 천주교에서는 재원 마련이 어려워 엄두도 못내고 있다. 공동기금 조성도 고려해볼만 하다.

입소대상자는 종교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의 자원으로 해야 한다. 품성개발 프로그램은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되, 종교행사 참여는 재소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부당한 음해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소위 “출마 위험” 주장은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합니다.

94년 개정공포된 우리 중헌은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2조에서는 “이 중헌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임’의 뜻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재취임한다는 뜻이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중헌을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타 군소후보를 지지하는 일부스님들은 송월주 총무원장이 만약 29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다면 3선에 해당하여 중헌에 위배된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송월주 총무원장은 연속으로 임기를 2회 수행한 바 없으며, 1980년의 직무 수행은 현행 중헌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헌 위배 주장은 아무런 근거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또한 80년도 6개월 동안의 총무원장 직무수행도 강압에 의해 사퇴하게 됨으로써 송월주 총무원장스님 개인의 불행에서 그치지 않고 중헌 전체의 비극으로 비화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비극을 무비판적으로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는 이들의 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당시 송월주 총무원장은 신군부가 광우항쟁을 진압한 5월 18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신군부를 지지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사회 각계의 크고 작은 단체들이 신군부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는 광고를 앞다투어 게재하던 그 서늘퍼런 시기에서

송월주 총무원장은 종교적 양심을 지키겠다는 결단으로 중헌명의를 물론 개인 명의를 지지의사도 일체 밝히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23일간 구속감금중이던 11월 7일 강압에 의해 총무원장직을 사퇴했던 것입니다.

현행 중헌에서 1회에 한해서 중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인의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를 막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헌의 개정 취지를 비추어 보더라도 20년 전 6개월여 동안의 짧은 임기를 수행하다가 부도덕한 정권에 의해 강제 사퇴당한 사실이 장기집권과는 하늘의 관계가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임이 드러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헌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중헌 운영의 최고 원칙을 애써 무시하면서 정당성 없는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전 중도의 합의로 이루어진 개혁 중헌의 권위와 효력을 부정하고 중헌의 위상을 실추시키려는 반개혁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월 29일 기자회견의 의도가 진정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소위 “총무원장 3선 출마 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라는 단체 명의로 이루어진 9월 29일의 기자회견문에는 보기에도 섬뜩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이 3선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부터 중헌은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며,

그 혼란이란 다음이 아니라 이 단체의 전면적인 3선 반대운동이라는 것이 기자회견문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중헌의 안정보다는 불안을, 화합보다는 분열을 추구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과 대립, 반목의 역사 속에서 우리 중헌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총무원장의 평균 임기가 고작 1년에 불과했고, 술한 대립과 분쟁으로 같은 스님들끼리 반목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불사 이후 중헌은 가까스로 안정을 찾아 승가교육과 전법도 생을 중헌의 중심 과제로 설정하였고, 비로소 일정한 수준을 갖춘 중무행정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찰의 재정은 투명화되어 많은 재원을 교육과 포교 등 중헌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견해가 다르더라도 서로 양보하면서 중헌의 발전을 위하여 힘을 모으는 화합의 풍토는 이제 낫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중헌의 사회적 위상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중헌이 이토록 안정속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전 중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취하였던 중헌 개혁 불사와 중헌 개혁 불사를 여법하게 계승한 현재의 개혁중헌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중헌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몇몇 군소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스님들의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것처럼 분열과 대립의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중헌 개혁의 정신을 계승하여 화합과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

군소후보 지지자들도 건전한 선거 풍토 조성에 협력해야 합니다.

승가의 해안은 흑백과 옥색을 능히 가리는 법입니다. 상대 후보를 음해함으로써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는 의도는 이제 승가 대중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화합과 발전의 장이 되어야 할 총무원장 선거를 타락과 분열의 장으로 만드는 해종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화합과 발전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올바른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대중의 검증을 받는 것이 올바른 선거 문화이며, 이런 선거문화가 정착될 때 중헌에서 부족받은 바, 이 땅의 불일이 만고에 빛날 것입니다.

아울러 기자회견에 동참하신 각 단체는 중헌의 화합과 안정, 부단한 개혁을 통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각 단체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청류와 탁류가 만나면 청탁이 혼재되어 오직 탁류만이 보이듯이, 중헌 발전의 좋은 뜻을 가진 이들이 한순간 판단의 착오로 잘못된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탁류에 휩쓸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기 2542년 10월 1일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성타(제11교구본사 불국사 주지)외 준비위원 일동